

통상당국이 “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”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(국민일보, 7.17) >

◆ 통상당국 “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”

-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한미 관세협상의 시작을 위해,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

□ 최근 한·미간 통상회의(7.5) 이후,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.

-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, 통상추진 위원회,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현재 구글 및 애플사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,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 공간정보제도과	책임자	과 장	유상철 (044-201-3478)
		담당자	사무관	김통일 (044-123-3480)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안홍상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우 (044-203-5657)